

누리과정 대치...추경, 9월로 넘기나

본회의 처리 무산...오늘 재협상
지방재무 상환 6천억원 입장차
백남기·구조조정 청문회도 위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막판 난항을 겪으면서 이날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31일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합의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추경안 처리가 불발된다면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 1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이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도 크다. 또 추경안과 같이 합의했던 백남기 청문회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도 동시에 파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늦어도 31일에는 추경안의 합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전날 추경안조정소위를 열어 이날 새벽까지 막판 쟁점이었던 지방교육채 상환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입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전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으로 급증한 지방재무 상환을 위한 예산 6000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이 추경안 처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 열기로 한 본회의는 불발됐다.

야권은 추경안에서 지방교육채 상환예산 외에도 초·중·고 우레탄 트랙교체 사업(776억원), 도시지역 통합관사 신규 건설 예산(1257억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예산(700억원)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결위 3당 간사 회동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3당 예결위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오른쪽부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필요한 재원은 외국환평형기금 출자 예산(5000억원)과 산업은행에 지원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등 정책금융예산(4000억원) 등을 삭감해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우레탄 트랙교체에 대해서는 양보 의사를 나타냈으나 지방교육채 상환예산은 국가재정법에 근거 조항이 없다며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왕 편성된 추경이니 최대한 민생일자리와 아이들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3당 원내 지도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오늘 중 하지 않으면 백남기 청문회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약속도 동시에 파기될 수 있다”며 압박했다.

반면, 더민주 이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일자리를 위해 추경하자던 정부여당의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오늘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 비주류 “우병우 빨리 사퇴해야”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30일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 하고 나섰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수석은 하루라도 빨리 사퇴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일에도 우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해훈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민정수석 자리에 앉아 있으면 검찰의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면서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늦어도 추석 전에는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도 MBC라디오에 출연, “우 수석이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측면에

서 본인이 판단하길 바란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 제출에 대해서는 비주류 내부에서도 반응이 다소 엇갈렸다.

김성태 의원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며 긍정 평가했다.

이해훈 의원은 “애석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수사의 형평성 측면에서 이 검찰관이 사표를 냈는데 우 수석이 사퇴하지 않는 건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무성 전 대표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다면 그런 사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은 이종걸 “친문 지도부 호남 경시 우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종걸(사진) 의원은 “당의 지도부는 축복이 아니라 싸늘한 시선 속에서 출발하게 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30일 오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이번 전당대회는 지극히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았다”며 “대표뿐 아니라 최고위원까지 특정 계파 일색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고 많은 분이 우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민주 지지율이 호남에서 지난주보다 10.6% 포인트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폐쇄적 패권주의에 소외당한 호남 여론이 더 나빠질까 걱정했는데 불길한 예상을 벗어나

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친문 지도부 색채가 더 강화된 전당대회 결과가 반영되면 여론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래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35%의 지지를 갖고 있는 만큼 향후 이분들과 민주당의 균형 추를 잡는데 노력하겠다”면서 “정치의 새로운 출발을 호남과 함께할 것이다. 호남 없이도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호남을 경시하는 당 내부의 패권적인 선거공학자들과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오늘 장관 청문회...더민주 날선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더민주 김한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2001년 10월에 경기 용인 소재 291㎡(88평) 고급아파트를 시세보다 약 2억원이 싼 4억6000만원에 매입했고, 농협은행에서 전액대출을 받아 본인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약 1년간 거주하다 미국 파견 근무를 가게 되자 기이하게도 빈집을 국내 골지의 식품 대기업이 전세 임대료 들어왔다”며 “당시

김 후보자는 농식품부 고위관리직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식품 대기업으로부터 3억원의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 이자를 갚는 데 사용했고, 2006년 김 후보자가 미국에서 돌아와 해당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3억7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미분양이 많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었다”며 “규모 면에서도 전용면적은 291㎡(88평)가 아니라 205㎡(62평)”라고 밝혔다. 이어 농협은행 대출과 관련해서는 “매입금액 4억6000만

원 중 4억5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 평가액이 5억7000만원 수준으로 농협에서 감정가의 80% 수준을 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더민주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민주 노용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09년 재산신고 당시 예금이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후보자 부부의 소득액 합계를 초과하는 수치”라며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예금액은 2008년말 기준 7억8600만원이었으나

2009년말 기준으로는 11억9100만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배우자의 예금액도 7억7400만원에서 9억7900만원까지 늘어, 부부의 예금액 증가분 합계는 6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또 “조 후보자와 배우자는 2009년 10월 전세 9억5000만원의 빌라에서 반포2동 소재 12억원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다. 전세자금이 2억5000만원이 더 필요했음에도 은행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일은 없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 증가분에 대해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재수 농림...88평 아파트 매입 등 특혜 의혹 조운선 문화...예금 6억 증가 자금 출처 불분명

김경진, 사드 전자파 적합성 평가 법안 발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전에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 보호기준에 적합한지 평가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자파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전자파법은 안보·외교적 목적으로 특정 주파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승인하게 돼 있다. 또 전자파 장애를 주는 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설치되는 사드의 경우 수입되는 기자재가 아니어서 적합성 평가가 면제된다.

김 의원은 “사드 전자파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적합성 평가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주파수 사용승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